

정책동향

2002년 산업기술자금 1兆 지원

정부는 오는 2010년 세계 10대 기술강국을 목표로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내년도 산업기술자금을 1조원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 4월까지 산업기술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산업기술지도(로드맵)를 50개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02년 산업기술 예산사업 설명회'에서 "정부는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세계일류화에 주력해 작지만 강한 나라를 지향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또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정부는 '감독자'가 아닌 '치어리더'로서 산업별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기술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각중 전 경련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 윤영석 기계산업진흥회 회장을 비롯 산·학·연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차원에서 기술예산 설명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예산에 따르면 내년 산업기술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1조227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기술개발자금은 올보다 16.8% 증가한 5097억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인프라)자금은 23.2% 늘어난 2977억원이 지원된다. 용자자금인 산업기술자금은 올해와 동일한 2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들 자금은 모두 내년 상반기내 집행될 예정이다.

이 중 산업기술개발자금은 개발기간이 4~5년 걸리는 '중기거점기술개발'에 843억원, 5년 이상 소요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에 45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일류상품 개발기술로지정된 과제는 평가시 총점의 10%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부품소재 기술개발자금도 지난해 767억원에서 129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산학연공동연구시설 인력양성 △정보화 표준화 디자인 등의 인프라구축에 97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건립 등에는 8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산돼 있는 지역기술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산업기술기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민·관공동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한편 투자자와 사업자의 '짝짓기' 행사인 테크마트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또 국내·개발기술의 해외 출원비용지원을 늘리고, 기술수출 보험상품을 신설하는 등 기술수출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기술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예산관리도 강화된다. 남인석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41개 평가위원회운영하고 평가실명제와 연구비 카드제 등을 도입해 기술자금의 평가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품 소재 전문인력 中企 파견

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부품소재 전문인력 1만명을 중소기업에 파견, 생산 및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닷을 올렸다.

산업자원부는 연구기관 및 수요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품소재통합연구단(단장 주덕영) 기술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연구단은 1만명의 연구인력과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기업에 단순 자문에서부터 인력파견, 장비·시설 지원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이런 서비스 비용의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올해 본격 시행에 앞서 연구단은 진광이엔씨 등4개 시범기업에 8명의 석박사 인력을 파견, 기술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연구단은 또 기업 및 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갖는 한편 1만여 중소기업에 사업안내서도 발송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연구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는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장비, 기술정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中企 300억 추가 지원

경기도는 미국테러 이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피해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지원경영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키로 하고 상환연기 신청서를 이달말까지 받는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수출품 선적지연 및 수출상담 중단 업체와 선적서류 송달 차질로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업체 등이다.

자금 지원조건은 신용보증서 제시업체에는 연 5.25%, 부동산 담보제공 업체에는 연 6.25%의금리로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서는 농협중앙회, 지역상공회의소, 시·군 중소기업지원 관련부서에서 접수한다.

산업기술 개발 관리 강화

산업자원부는 핵심산업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운영요령에 따르면 그동안 평가위원회의 평가만 거쳐 이뤄지던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자금 지원을 △실무작업반의 사전검토 △지원대상 과제의 발굴 및 사업수행 후보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등 3단계에 걸친 평가체제로 개선했다.

이와 관련, 평가사안이 있을때 마다 구성하던 평가위원회를 41개 기술분과별로 상설화하고 평가위원별 평가실적을 관리하는 평가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금 8,773억 지원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모두 8,773억원이 지원된다. 산자부는 전력수요관리·전력연구개발·전력공익·타에너지지원사업 등에 모두 8,773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은 전력분야의 경쟁시장 체제도입에 따른 공익기능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한전에서 산자부로 이관됐다. 이 사업은 전기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주요재원으로 수행된다.

기금 사용은 우선 전력수급안정과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축냉기기 및 직접부하제어기기 보급지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지원 등 전력수요관리사업에 1,208억이 집행된다.

총 937억원이 책정된 전력·연구개발사업비는 고효율 발전기술, 차세대 전력계통기술, 전기안전및

환경친화 기술 등 전력분야 공익성기술개발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쓰여진다.

또 전력공익사업에 쓰여질 1,992억원은 발전사업자의 신규 발전설비건설유도(500억 용자)와 전원입지확보 및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와 지자체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정부는 도서벽지 안정적 전력공급(771억원), 전기설비 안전관리강화(432억원) 지원 등 전력공익사업에 모두 3,695억을 지원하고 국내무연탄발전 등에 따른 손실보전과 대체에너지발전사업 육성 등 타에너지 지원사업에 2,901억원을 지원할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02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1/4분기와 상반기에 기금운용을 최대한 확대·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부사업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중기 기술혁신개발 985억원 지원

중소기업청 (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력향상을 위해 내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으로 올해보다 130억원(15%)이 늘어난 98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 중 75% 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주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30%를 개발 완료 시점에서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특히 금융권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 달리 무담

보, 무이자, 출연금으로서 취약한 재무구조, 고급인력 확보곤란 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도 연구개발비 지원범위를 보면 일반과제에 785억원, 특히기술개발과제에 20억원, 전략과제에 1백80억원을 각각 지원하며, 지원대상 업체수는 약 1천500개로 예상된다.

참여기업은 전체 소요연구개발비 중 25% 이상을 부담하되, 현금 또는 현물부담이 인정되며, 현금비중은 최소한 15%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철도청, 중기제품 8천억 우선구매

철도청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7천989억원가량의 중소기업제품을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은 2002년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10% 증가한 7천98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중 70%를 상반기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철도청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상반기 중 70%가 조달되도록 계상하고 1분기 소요물품은 계획 수립 전에 우선조달 방식을 통해 조기구매키로 했다.

또 2·3분기 계상물품도 예산이 확보되면 수급계획을 앞당겨 구매하는 한편 연간단가계약을 1월 중

완료하여 구매청구와 동시에 발주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사 및 용역은 1월중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완료하여 상반기 중 계획된 모든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계약은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시켜 조기약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부문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고 차수 계약이 이루어진건은 1분기 중 발주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과 경합하는 물품은 중소기업과 우선 협상을 통해 구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구매정보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중기청, 중기 해외홍보비 무료 지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회사를 알리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비를 전액 지원할방침이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규창)은 수출중소기업들이 회사 및 제품을 해외바이어에게 알리려 해도 해외전문지 광고 방법과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판단,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을 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7개국의 광고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광고매체를 선정해 기업과 제품을 무료로 실어줄 계획이다.

정부 PL팀 본격 가동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7개월 남짓 남겨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산자부는 작년9월13일 PL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으나 그동안 책임자없이 사무관 1인이 준비작업을 해왔다. 그러다 PL(제조물책임)팀장에 沈愚定 서기관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제반업무 파악에 돌입했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 본격 가동한 PL대책팀은 구성원 면에서 인선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팀장(과장급)으로 임명된 沈서기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해외업무를 10여년간 전담한 국제통으로 국내 제조물의 해외 수출입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세계각국의 PL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인사로 알려졌다.

또 작년9월 PL대책팀 결성 이후부터 최근까지 혼자서 정부의 정책을 조율해왔던 池建仲사무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유통서비스과에서 근무하며 PL법 시행에 앞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각종 법안을 사전 조

율해 오는 등 유사업무를 맡아온 인사로 알려졌다.

제조물책임(PL)팀은 당분간 沈팀장과 池사무관 2인체제로 가동될 예정이며 생활산업국·자본재산업국 산하의 10여개과 사무관이 결합하는 형태의 /임시기구/로 가동될 전망이다.

PL팀은 올 7월 PL법 시행에 앞서 제조업체들의 대응책 마련과 이법 취지에 대한 정부의 각종 시책을 적극 홍보하게 되며 해당과의 대책반 운영 및 분야별 세부대책을 조율하게 된다.

沈愚定 PL팀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PL관련 대책안을 종합 검토중에있다"며 "실무과 사무관들의 종합보고서를 연말까지 취합해 총체적인 PL 세부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들의 PL 준비상태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그는분야별 제조업체들을 관할하는 해당 협·단체 및 정부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PL법 세부지침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